

**2020년**

**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작됩니다.**



- I 공익직불제란?
- II 직불제 성과 및 한계
- III 공익직불제 개편방향
- IV 공익직불제 세부시행방안

- V 부정수급방지 방안
- VI 기대효과
- VII Q&A



1

---

공익직불제란?

## 공익직불제

-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, 농촌유지,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

- EU,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발전(녹색직불도입, 2013년~)하였으며, 일본 등도 도입(농지유지직불도입, 2014년~)



공익창출



보조금 지원

# II

## 직불제 성과 및 한계

### 쌀 직불제 도입

- '04년 쌀 재협상 등 시장 개방에 따른 쌀값 하락 시  
농가 피해보전을 위해 도입('05)



- 도입효과

#### ① 농가소득안정 도모

목표가격과 산지쌀값과의  
차이의 85%를 보전하여  
농가수취가격을 매년 목표  
가격의 95% 이상 달성

#### ② 규모화, 생산구조 효율화에 기여

안정적인 농가 수취액 유지로  
쌀전업농 육성목표 등 달성

☑ 쌀전업농 경영면적

2005년  
경영면적 비율

전체면적의  
30%

58%

2017년  
경영면적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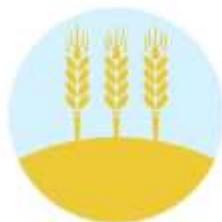
### 현행 직불제의 한계 1.

#### ○ 쌀 공급과잉 심화

- 쌀 직불금은 쌀 생산 조건으로 지급되고, 타작물보다 높은 단가\*를 지급하여, 쌀 공급과잉 심화 요인중 하나로 지정

\* ('16년산) 쌀 311만원/ha, 밭 40만원/ha ▶ ('17년산) 179만원, 45만원 ▶ ('18년산) 117만원, 50만원

- 최근 5년간 연평균 25만 톤의 추가재고로 4천억 원 수준 재정손실 발생



'18년산 쌀

117만원/h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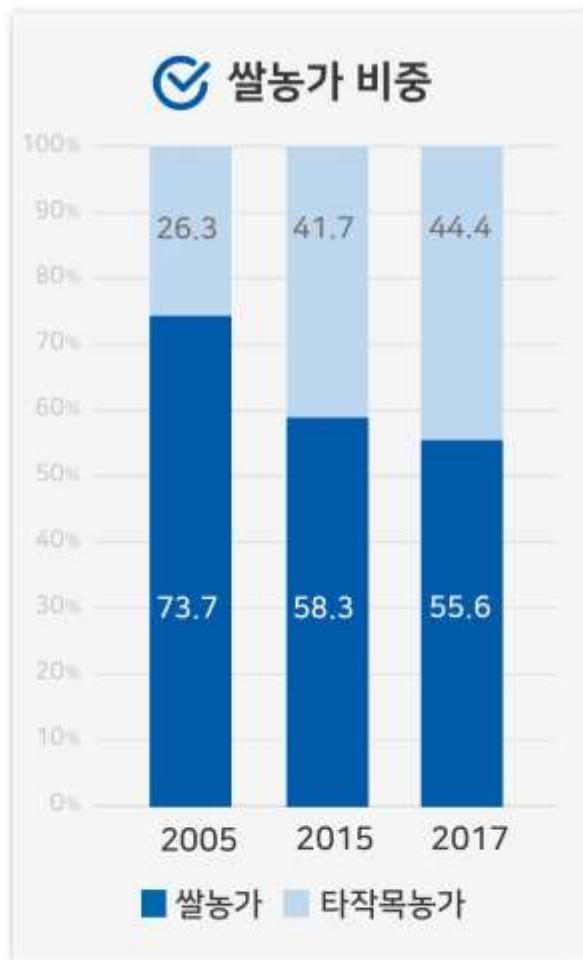


'18년산 밭

50만원/ha

### 현행 직불제의 한계 2.

- 타작목 농가·소농의 소득안전망 기능 미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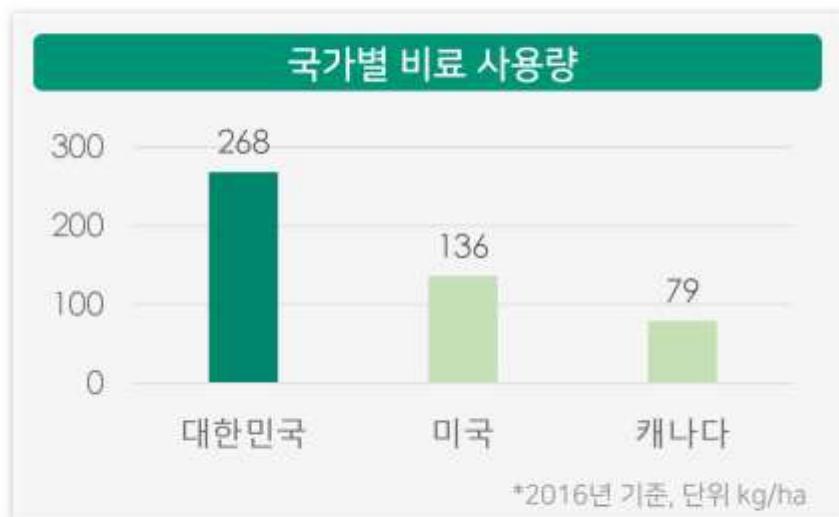


### 현행 직불제의 한계 3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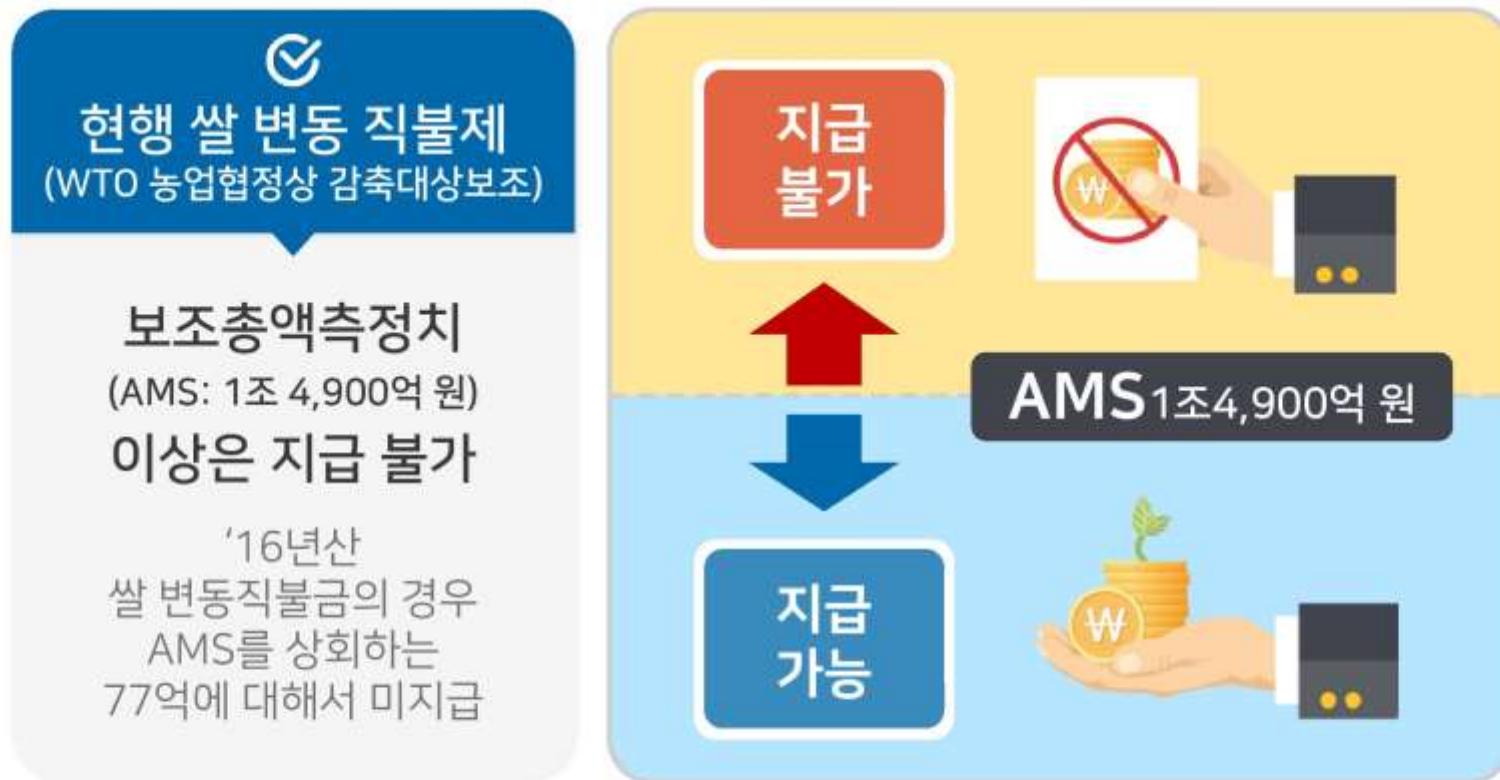
- 안전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, 심터로서의 농촌, 환경·생태·문화보전 등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지는 요구수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

최근 10년간 농업·농촌의 기능에 대한 소비자 인식(KREI, '18) :

“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” ('06: 42.3%→'16: 34%), “자연환경 보전”(10.9%→25.8%)



### 현행 직불제의 한계 4.



# Ⅲ

## 공익직불제 개편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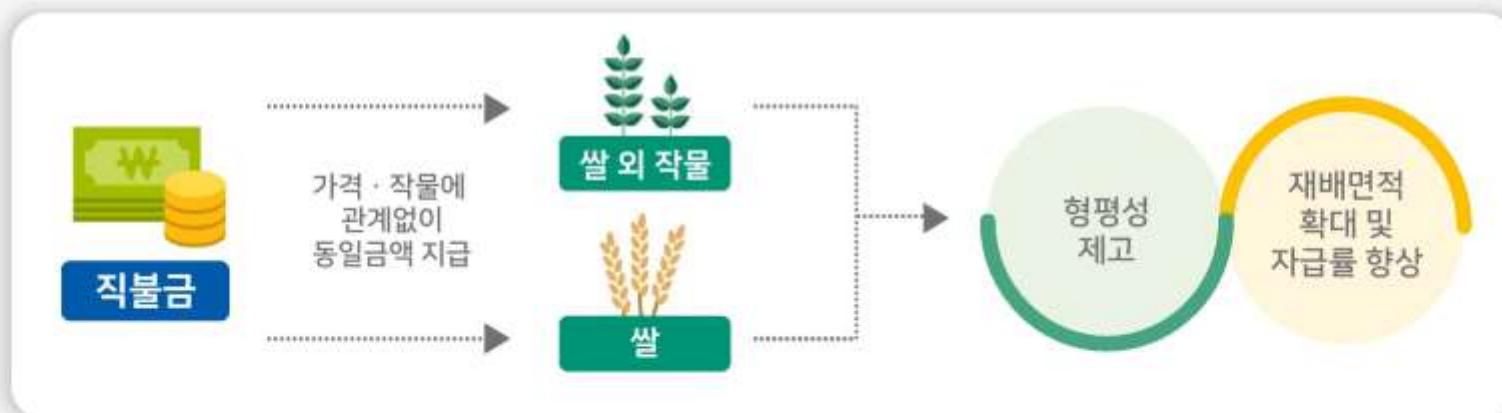
## 개편방향 1.

### ○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 전환 및 작물간의 형평성 제고

☑ 모든 작물 대상으로 동일금액을 지급함으로써,

- 논·밭 농가의 형평성 제고
- 콩·사료작물 등의 재배면적 확대 및 자급률 향상

콩 재배면적(자급률): ('17년) 49천ha(22.0%) ▶ ('23년 예상) 75천ha(33.0%)



## 개편방향 2.

- 중·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간 형평성 제고



### 소규모 농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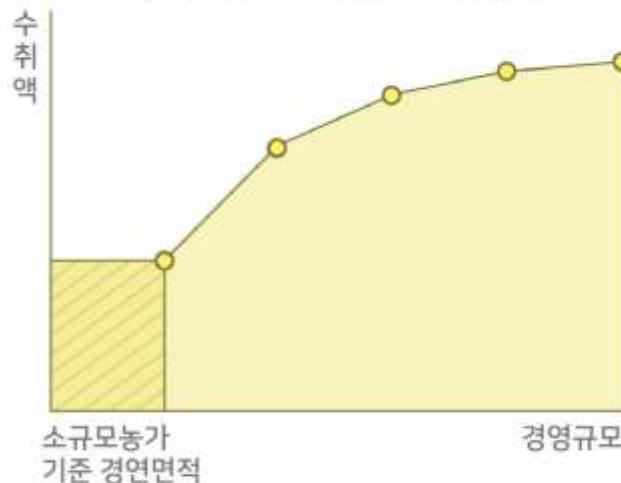
면적과 관계없이  
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 
소득안정 도모



### 그 밖의 농가

면적에 따라 단가를  
차등 지급하여  
직불금 양극화 개선

☑ 경영규모별 직불금 수취액(안)



## 개편방향 3.

- 환경 · 생태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

- 공익직불제로의 개편을 통해 환경보호·공동체 유지·식품안전 등  
농업 ·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의무 강화 추진



공익직불제



#### 개편방향 4.

- WTO 허용보조(Green Box)로의 변화를 통해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

- 공익직불제는 생산·가격에 연계되지 않는 '생산 비연계 허용보조'로  
AMS 한도에 상관없이 지급 가능 ▶ 제도의 지속 운영 가능

생산 비연계  
허용보조



AMS 한도  
상관없이 지급

# IV

## 공익직불제 세부시행방안

## 기본구조 1.

- 현행 9개 직불제 중 쌀직불제, 밭농업직불, 조건불리직불, 친환경직불, 경관보전직불 6개 직불을 '농업·농촌공익증진직불제(공익직불제)'로 개편
  - ◆ 경영이양직불과 FTA폐업지원 및 FTA피해보전직불 등 3개 직불제는 공익직불제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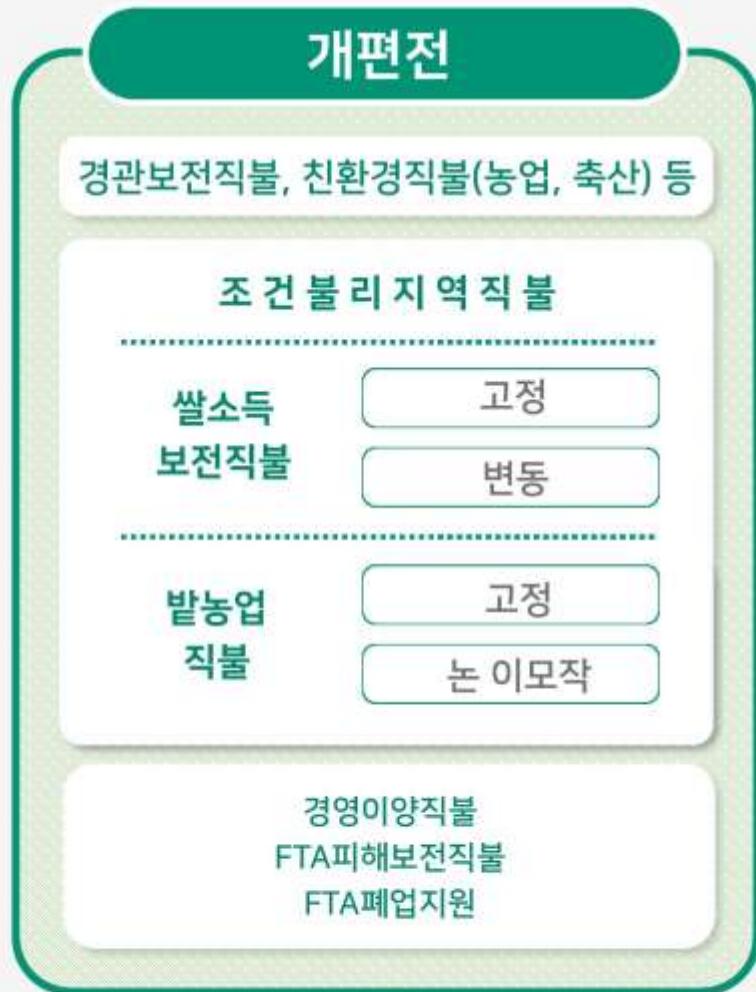


## 기본구조 2.

- 쌀 직불, 밭 고정, 조건불리직불을 '기본형 공익직불제(기본직불제)'로 통합  
-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2가지로 운영
- 친환경직불, 경관보전직불 등은 '선택형 공익직불제(선택직불제)'로 유지  
-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



## 기본구조 3.



## 대상농지·농업인

### 쌀·밭 고정·조건불리직불의 현행 요건 유지



단, 쌀직불금 대상농업인에만 적용되는 '과거 직불금 수급실적'을  
대상농지와 대상농업인 각각에 확대 적용

\*대상농지: '17~'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등

\*대상농업인: '16~'19년 4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

개편에 따른 대상농지의 급증 및 재정규모의 변동성 완화

## 소농직불금



### 소농 기준

경영규모 외에 영농종사기간,  
농촌거주기간 등의  
추가적인 기준 신설



### 지급금액

소농요건 충족 농가에 대해  
일정금액 지급

※ 향후 농업인단체·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소농 추가기준 및 지급금액 결정

## 지급단가 1.



○ 역진적 단가체계 적용 ▶ 소규모 농가 배려 확대



○ 과거 지급수준, 단가인상 예정액 대비 감소하지 않도록 단가 결정 ▶ 적정수준 단가 유지

- ☑ 과거지급 수준 · 쌀직불금 '13~'17년(직전 목표가격 적용기간) 평균 178만원/ha, 진흥지역은 185만원, 비진흥지역은 160만원 지급
- ☑ 단가인상 예정액 · 한·중 FTA 여야정 합의시 '20년까지 조건불리직불은 70만원/ha, 발고정직불은 60만원/ha까지 인상하기로 합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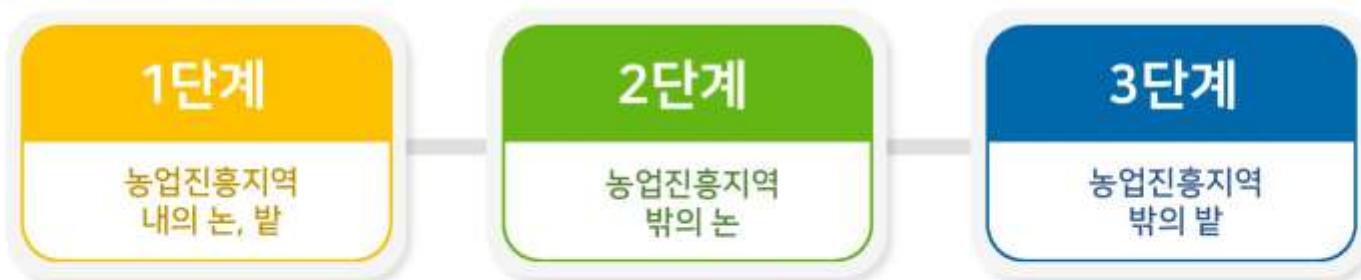
○ 논·밭 동일단가 적용 ▶ 쌀 수급균형 회복 도모



○ 진흥지역 논·밭 단가 우대 ▶ 우량농지 보전

## 지급단가 2.

### ◦ 3단계로 차등화



### ◦ 진흥지역 논과 밭 지급단가는 동일하게 결정

- 쌀 수급균형 회복, 논·밭 형평성 제고의 직불제 개편 취지 감안
- 진흥, 비 진흥지역간 단가차이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(20~25% 차이)유지



## 준수의무

### ○ 준수 의무 강화

- 농업의 공익기능 강화, 농업환경·정책적 도입 필요, 직불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감, 현장 수용성, 연구결과 등을 고려

### 5개 분야에 대한 의무사항 마련

#### 환경관리



비료 사용기준 준수,  
공공수역 가축분뇨 등  
배출금지

#### 농촌관리



영농폐기물 수거·처리,  
공동체 활동(마을경관  
개선 등) 수행 등

#### 영농활동



경영체 등록·변경신고,  
영농기록 작성·보관,  
교육 이수 등

#### 먹거리안전



농약·유해물질  
잔류허용기준 준수  
등

#### 생태계보존



농지형상·기능 유지,  
생태 교란생물  
반입금지 및 신고 등

V

부정수급방지 방안

## 부정수급 방지

### ◦ 시스템 통합관리

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정보 통합관리로 직불금 자격요건 검증 및 심사 강화



신청단계부터  
사전차단 및  
위험군 관리 필요



이행점검 결과를  
수시 모니터링 하여  
부적합 비율이 높은 지역은  
집중관리지역 등으로  
선정하여 타겟 조사 실시



영농종사·주거·실 경작여부,  
준수의무 및 경영체·농지  
정보 등과 관련된  
각종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 
사전·사후 자격검증 강화

## 부정수급 방지

### ◦ 관리·감독 기능 강화

- 특별사법경찰관·명예감시원 도입을 통해 관리·감독 강화

#### ☑ 특별사법경찰관이란?

특정분야 위법행위 수사를 위해 수사권을 부여 받은 행정공무원

#### ☑ 이통장, 생산자단체 등 지역정보가 많은 대상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, 관외경작자의 부정수급 여부 점검 등 협력체계 구축



## 부정수급 방지

### ◦ 제재·벌칙 강화

- 거짓·부정한 신청·등록 시 제재 대폭 강화

☑ **기존** 2배 이내 환수 및 5년 이내 등록제한

**개선** 5배 이내 환수 및 8년 이내 등록 제한

☑ 조사 등 거부·방해, 관련서류 미 보관·비치 과태료부과 및 양벌규정 신설



## 부정수급 방지

### ○ 신고 활성화

- 신고포상금 상향 및 부정수급 신고센터 활성화로 위법행위 적극 신고 유도

- ✔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50만원/건,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 
최소 50만원 ~ 환수액 30%으로 인상, 연간한도 폐지
- ✔ 시·군에 설치된 신고센터를 읍·면·동 및 농관원 지원·사무소까지 확대



신고포상금



✔  
최소 50만원~  
환수액  
30%인상



신고센터 확대



✔  
읍·면·동 및  
농관원 지원·  
사무소까지 확대



VI

기대효과

## 기대효과

사람중심의 직불제 개편을 통해 소득재분배에 기여



쌀 수급균형 회복  
및  
곡물자급률 향상

쌀 생산면적 감소 및 밭 작물  
재배여건 개선에 따른 재배 확대



논·밭 작물  
재배 농업인 간  
형평성 제고

밭 작물 재배 농업인에 대한  
직불금 지급액 증가



영세소농의  
소득안정 도모

일정규모 이하 농업인에 대해  
기본직불금을 지급,  
면적에 따른 지급 단가 차등화



**VII**

**Q & A**

## Q & A



### ◦ Q1) 공익직불금 신청 및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?

A1) '20년 4~5월 간 신청·등록을 거쳐 준수 의무 이행 점검(6~10월) 등을 실시한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.



## Q & A

### ◦ Q2) 내가 받는 직불금이 얼마나 오르나요?

A2) 이번에 통과된 법과 예산을 감안하여 향후 농업인,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지급 단가 등 세부 시행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며 직불금 신청시기에 단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### Q & A

- Q3) 쌀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 쌀 농가는 쌀값 하락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요?

A3) 매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고, 쌀 시장격리 및 생산조정 제도와 근거를 마련하여 수확기 쌀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